

실효성 없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 구체적 실천 내용도 없어 -

■ 현 황

1.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강제적인 규제 방안이라, 온실가스를 일정만큼 줄이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전편 자료 참조)

2. 이에 정부는 교토 의정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1998년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관계장관회의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되어, 제2차 종합대책(2002~2004)을 수립하였다.



3.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총 19개 정부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 2004년 10월부터 4개월 여에 걸쳐 마련한 제3차 종합대책은 모두 3대 분야 92개 과제로 정리되었다.

4. 건설교통부는 종합대책에서 총 9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 문 제 점

1. 92개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의 기존 추진 사업들을 나열하거나, 세부 추진 계획은 생략된, 그야말로 백화점 진열식 대책들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중요 과제인 협상기반 구축사업¹⁾과 온실가스관련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²⁾에는 2006년 기준으로 각각 1억 8천만원과 2십4억원만을 배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생색내기용 예산 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우선 2006년에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의 경우, 주력 사업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ies) 육성 사업이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ESCO 업체로 등록된 약 160개 사 가운데, 매년 30여 업체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05년도 국감자료) 이는 해당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4. 건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9개 과제³⁾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대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구체적 실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은 물론, 건설교통부가 제공한 해당 과제 추진 실적에도,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의 나열과 용역 시행 계획만 열거되어 있을 뿐, 가시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과제들에 막대한 예산이 할당되어 있고, 대부분 국고지원인데, 기후변화협약이 부처별로 예산 따내기 위한 구실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크게 육성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구조의 특성 상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제1차 의무대상국에게 적용되는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경우, 사실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질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의 브라질, 멕시코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협상기반 구축사업이다.

2) 온실가스에 관한 통계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협상의 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하는 사업

3) 각 과제의 제목들을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이용 효율등급 인증,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공차율 저감시스템 구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도),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4)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ETCS)]과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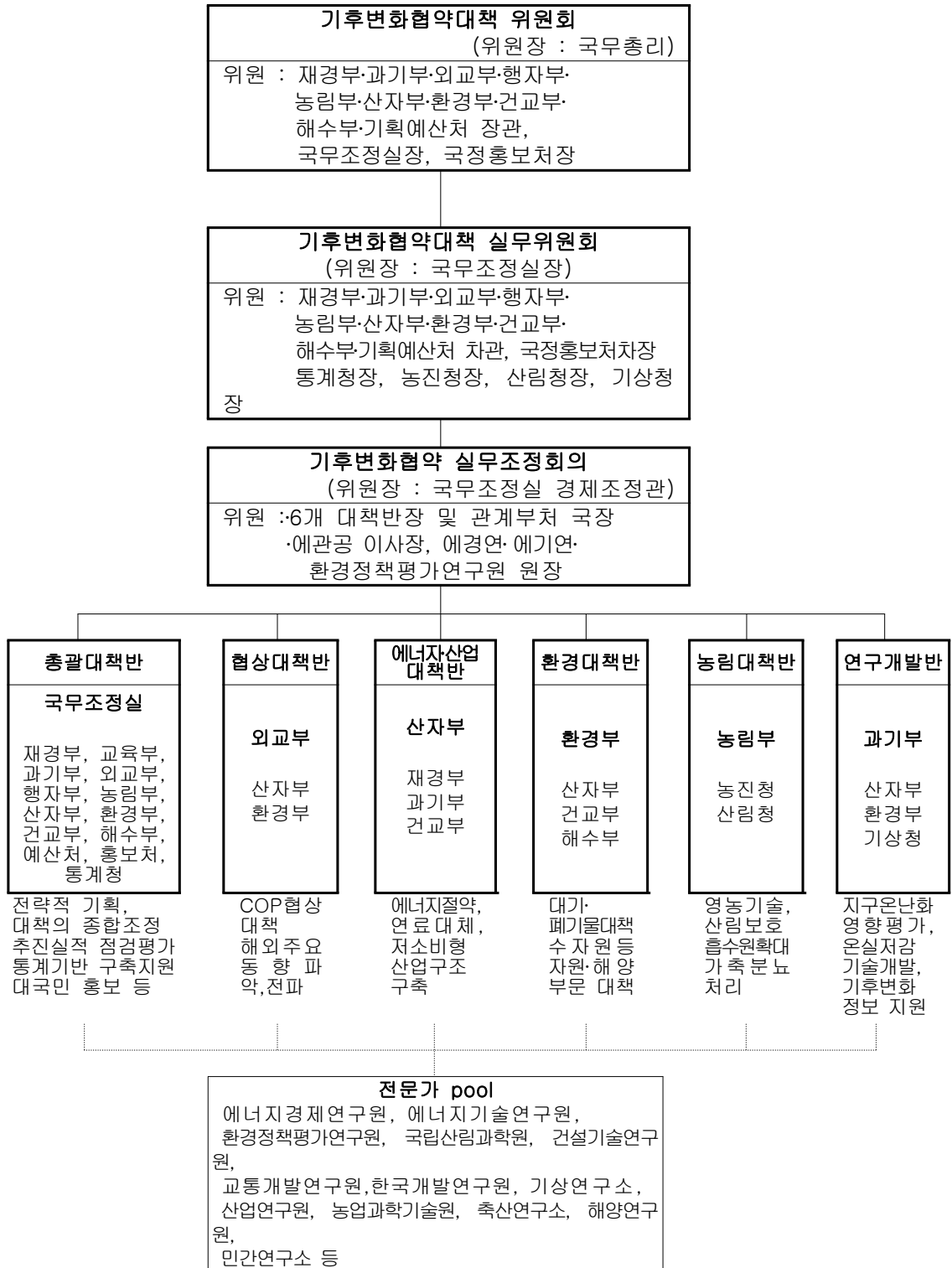
부문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계
협약이행 기반구축 사 업	협상기반 구축	100	180	190	1,153,589
	온실가스 관련 통계· 분석시스템 구축	1,540	2,410	3,050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 개발	256,548	390,133	482,434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1,859	2,995	7,800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700	1,300	2,350	
부 문 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463,916	510,179	567,255	15,429,435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 가스 감축	1,692,661	2,426,783	3,724,201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1,480	1,500	4,650	
	건물에너지 관리	657	100	3,297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관리	31,124	114,340	149,890	
	환경·폐기물 부문	1,426,408	1,401,883	1,473,974	
	농축산·임업 부문	406,402	468,817	559,918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	1,617	2,045	2,395	19,390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	2,600	3,373	7,360	
계		4,287,612	5326,038	6,988,764	16,602,414

5.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경우,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 역시 미비하다. 현재 배기가스 정밀검사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그 밖에도 제3차 종합대책 내에는 기후변화협약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나, 대책을 위한 대책의 나열에 불과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직체계가 지나치게 비전문가들로만 구성⁵⁾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5) 해당 조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와, 각부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관계부처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의 3개 위원회가 상하관계로 조직되어있다. 이런 비전문가집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총괄대책반과 각 부처별 대책반, 그리고 전문가 pool까지 가동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성상 기민하고 일사분란한 업무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 기후변화협약 추진 체계도 >



▣ 정책대안

1. 정부는 기후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좀 더 기민하고 일사분란하게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2. 무의미한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사업수가 적더라도 훨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3. 이에 대한 예산 편성 또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를 위해서는 독일 등 배출권을 판매하는 환경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